

9.23 총파업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9·23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대회를 소집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총궐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아합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우리를 믿고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시에 현장을 멈추고 서울로 쏟아져 나오시다. 투쟁은 타이밍입니다. 단위사업장 대표자 동지들의 결단이 대반격의 시작입니다.”(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자료집)

왜 추석 전 돌입이어야 하는가?

한상균 위원장의 지적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아합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한다. 맘대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것이고, 16일 새누리당의 입법 발의에서 보듯이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만 박근혜의 ‘노동개혁’ 속도전에 다소라도 제동을 걸 수 있다.

투쟁의 때를 놓치고 결국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면, 사태가 견잡을 수 없이 기울었다는 생각과 무기력감에 이후 투쟁을 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 시”가 아니라는 듯이, 투쟁을 미루자고 한다. 그러나 개악 법안 “국회 상정 시”



또는 “통과 시”처럼 이미 사태가 기운 다음에는 상황을 되돌리기가 더 어렵고, 그걸 뺏히 아는 노동자들이 투지를 발휘하기도 힘들다.

총파업은 노조 지도자들이 원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 같이 아니다.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커다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지금이 바로 투쟁의 적기다.

어떤 사람들은 총파업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 위협에 대비해 조합원들을 미리 준비시키지 못한 점은 돌아볼 만하다. 그러나 촉박하더라도 철든 한국인의 관심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쏠려 있는 이 뜨거운 시기에

‘촉박하게’ 총파업에 들어가는 게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하루 이틀 파업만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추석 전 총파업 돌입으로 추석 귀향 여론에 영향을 미쳐 추석 후 좀 덜 불리한 조건에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 노동자들이 투지 있고 더 자신 있게 되면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함부로 부리기가 좀 더 조심스러워진다.

공은 국회(논의)로 넘어갔나?

어차피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때(11월 또는 일러야 10월) 싸우는 주장은 위에서 든 이유들로 부적절하다. 우선, 그런 주장은 법 개정이 아니라 가

이드라인으로 당장 추진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문제에는 속수무책인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차피 국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정은 보아 넘기자는 것이다.

또, 그런 주장은 국회 논의 대응에 중심을 두면서 투쟁은 압박용으로만 부차적으로 사용하려는 구상과 맞닿기 쉽다. 그러나 국회 논의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할 수 없다.

실사 국회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런 기구는 “일방적”이지 않은 모양새를 펼 뿐 경제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양보를 설득하는 구실을 한다.

>> 뒷면으로 이어짐

홈플러스·티브로드·서경지부·교육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지지를!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홈플러스, 티브로드, 대학 청소·경비·시설관리,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년간 투쟁하고 성과를 내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 홈플러스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는 고용 안정 협약을 맺자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MBK는 이미 ING생명과 씨앤엠을 인수하고 나서 노동자들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16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23일에 1차 파업을 하고, 이후에도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버르고 있다.

MBK는 당장 나와 고용 안정 보장하라!

▶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식비, 명절 상여금 등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말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소한

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요구이자,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 티브로드 비정규직

케이블방송 업체 티브로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수리·설치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쥐어짜려 한다. 지난 몇 달간 사측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진짜 사장’ 티브로드 원청이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

장해야 한다.

▶ 연세재단빌딩

서경지부 소속 연세재단빌딩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복직 투쟁을 한 지 2백 일이 지났다. 올해 3월, 연세재단빌딩은 ‘협동조합과 용역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서경지부 조합원들을 배제시켰다.

또, ‘진짜 사장’ 연세대는 8월 15일 노동자들을 복직시켰다는 합의서를 써놓고, 며칠 뒤 약속을 뒤집었다. 노동자들은 “두번 농락당했다”고 분노하며, 지난 19일부터 연세대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 앞면에서 이어짐

국회 논의 대응에 중심을 두면 새정치 민주연합과의 공조에 매달리게 되기 십상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새정연은 결코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자며 대기업·정규직 양보를 주장하는 한편, 노동개혁뿐 아니라 재벌개혁도 하자는 식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그들이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써 온 꼼수일 뿐이다. 1997~98년 이후에도 재벌의 경제 장악력이 여전히 점점 커지고, 빈곤이 점점 증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재벌개혁'은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반면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은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올해 공무원연금 개악에서도 새정연은 '대타협'의 이름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했다.

이처럼 난점이 거듭 드러난 방식을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에서 되풀이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 법 개악에 맞서려면 새정연에 의존하지 말고 국회 밖 투쟁, 특히 대중 투쟁에 확고한 중심을 뒤야 한다.

상반기 투쟁의 약점을 반복해선 안 된다

여기서 상반기 투쟁을 상세히 돌아보는 것은 어렵다. 다만,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될 점 두 가지만 언급하려 한다.

첫째, 민주노총은 9·23 총파업 이후 후속 투쟁 계획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 4·24 총파업 이후 후속 투쟁 계획이 신속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약점이었다. 하루파업으로는 박근혜의 공세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4·24를 성사시킨 자신감을 발판으로 이후 투쟁을 확대해 가야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4·24 이후 투쟁 공백이 있었다는 약점이 추석 후에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일회성 집회와 다름없는 '총파업'에 그치면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온건파들의 '파업 무용론' 목소리를 키우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둘째, 산하 노조들이 펼쳐는 투쟁 전선의 균

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령 이총재 전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4·24 총파업 전부터 국민대타협기구에 참가하며 공무원연금 개악 수용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5월 2일 개악안에 합의해 이후 투쟁 전선에 악영향을 미쳤다.

현재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투본에 속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위 야합이 있는 뒤에도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과 함께 '노동 실무협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노조가 9·23 총파업으로 힘을 모으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9월은 어렵고 10월이나 총파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4·24 총파업 당시에도 공공운수노조는 투쟁을 6월로 미뤘는데, 이때도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과 함께 기재부·노동부와 의 실무협의 테이블에 참가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제대로 맞서려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 실무협의를 중단하고 총파업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계급 대표성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서 각자의 조직 상태를 앞세우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것이다.

우익이 아니라면 다 인정하듯이,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노동자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다.

그간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과연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바로 지금 그 회의적 질문에 답변할 때다.

민주노총은 단지 조합원뿐 아니라 광범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도 반대해야 한다. 잘 조직된 사업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를 단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험에 직면한 다른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하나의 계급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동안 우경적 노조 지도자들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 핑계를 대며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잠식해 왔다. 그러나 계급 대표성을 위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면 오히려 투쟁성을 칭찬하고 고무해야 한다.

"범국민적" 투쟁을 말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조직된 부문으로서 제 위상을 과시해야 한다. 그러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에 회의적 눈길을 보냈던 청년들로부터 마치 2013년 연말에 받았던 것과 같은 광범하고 열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노동개혁"

새누리당 법안은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청년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가득하다.

정부·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한다. 55세 이상 노동자와 '고소득·전문직', 제조업 일부에 파견 노동을 허용하겠다고도 한다.

불법 파견의 징표들에 구멍을 내서, 현대차 정몽구 같은 자들이 불법파견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려고 한다.

박근혜가 확대하겠다고던 실업급여 관

련 법안도 실제로는 개악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춰 급여자 대다수의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받는 기준도 더 까다롭게 하려고 한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장시간 노동 허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공격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지 않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또, 가족이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로 여러 불이익을 받고, 성희롱과 비정규직화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도 더 악화될 것이다.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쉬운 해고

- 부도·파산 위기 아니더라도, "일반해고"란 이름으로 일상적 해고
-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전환배치, 임금 삭감 뒤 해고까지
[추석 전후 가이드라인 발표 → 향후 법제화 가능성]



임금 삭감

- 고령자 임금 삭감(임금피크제)
- 성과 경쟁 부추겨 임금 삭감하고 단결 저해(직무-성과급제)
[추석 전후 가이드라인 발표(취업규칙 가이드라인) → 향후 법제화 가능성]



더 많은 비정규직

- 정규직화는 기대 말고 비정규직으로 살라
- 기간제 기간 2년 → 4년 연장, 고령자·제조업 일부 파견 허용
[11월 국회에서 법 개악(기간제법, 파견법)]



시장 맘대로 취업규칙 개악

- 미조직·비정규직·취약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 맘대로 취업규칙 개악
- 노조 있는 사업장의 단협에도 정부가 개입해 시정명령
[추석 전후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



장시간 노동 유지

- 최소 8년간 주 60시간 근무 허용, 중복할증 없애 휴일근로 수당 축소
- 수당 없이 사용자 맘대로 노동시간 줄였다 늘렸다(탄력근무제 확대 등)
[11월 국회에서 법 개악(근로기준법)]



통상임금 범위 축소

- 전체 사업장 3분의 1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재직조건 규정)
- 주택수당, 체력단련비 등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 항목도 제외될 수 있음
[11월 국회에서 법 개악(근로기준법) → 직후 통상임금 제외항목 시행령 발표]

노동자 정치 신문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연대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